

시선

사설

혼란한 시국에 당면한 선거에 부쳐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일 개인, 특히 선출직 리더로서의 일 개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나의 직위, 나의 당선은 곧 나 자신에 대한 구성원의 무한 지지일 것이라는 착각이 그것이다. 이 달콤한 오류에 빠진 리더는 나의 결정을 중요시하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 하며 나의 가치관이 바로 공동체의 가치관이라고 쉽게 착각한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의 리더라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리더는 항상 듣고 근면하게 중재하고 끝없이 소통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리더란 본질적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다원주의 물결 속에 파편화된 개인들의 집합체인 공동체에서 민의를 대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저마다 다른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가진 구성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여러 마찰을 중재해야 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통해야 한다. 듣고, 중재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리더에게 있어 ‘의무’라기보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구성원은 후보자 개인의 인품이나 실제 성격, 가치관, 기호, 친인척 관계를 보고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표하기에 공식 선거기간은 너무나 짧고 공개되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구성원은 다만 후보자의 공약과 그 공약의 이행 가능성, 그리고 접근가능한 후보자 관련 정보 정도에 근거해서 투표에 임한다. 때문에 리더는 매순간 공인으로 서의 선명한 자기 인식 속에 사적 선호나 욕망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골몰하고 힘써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실패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과오로 인한 피해는 대체로 구성원 전체가 분담하게 된다.

지난 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임기 마지막 해외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니아코스 재단 연설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한 개인보다 훨씬 큰 것이기에 매끄러운 정권 이양이 가능하도록 최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민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자로서,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신념과 정 반대 위치에 있는 후임자를 선택한 미국민을 바라보며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좋은 리더는 항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의의 흐름과 함의를 파악하고, 그것이 나아갈 방향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사적 인식이 공적 인식을 덮고 귀머지 가리는 순간, 리더는 더 이상 민의를 다룰 능력을 잃고 비극적인 일 개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구성원 모두는, 그런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국제캠 작은 나눔 가을 음악회 생과대, IFMA 국제인증 획득

미디어 여론동향 2016.11.7. ~ 11.2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2016 생활관 작은 나눔 가을 음악회’가 지난 10일 예술·디자인대학 A&D홀에서 열렸다.(작은 나눔을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대학주보 온라인, 2016.11.14.) 국제캠퍼스(국제캠) 우정원과 제2기숙사생들의 기부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까지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는, 이날 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이벤트와 강연, 공연이 진행됐다. 가을 음악회 모금액과 국제캠 양 기숙사에서 모인 기부금은 3백만 원 가량으로, 지역사회의 불우 청소년과 결혼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선 휴학을 권

만평



이 주의 주제 - 식품영양학과 내규 변경

대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현진 기자
ohyunjin@khu.ac.kr

식품영양학과(식영과) 전공 내규가 변경됐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전공 수업 재수강 시 최대 취득 가능 학점은 B+로 제한된다.

이번 식영과 재수강 제도 변경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기 위해 먼저 생활과학대 행정실에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돼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수에게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식영과 윤기선 학과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당일 밤 교수가 메일을 읽었음을 의미하는 ‘수신확인’이 떠 있었다. 하지만 답변이 오지 않아 이를 뒤 같은 내용을 보낸 문자에 “메일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재수강 제도에 대해서는 학교 본부와 이야기하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하라는 대로 학교 본부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학사지원과는 “식영과 재수강 제도 변경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오늘 통화로 이 사실을 처음 접했고 이후에도 답변은 단과대 행정실을 통해 받으라”는 실망스러운 대답만 주었을 뿐이다. 행정실은 교수로, 교수는 학교 본부로, 본부는 행정실로 책임을 돌렸다.

철웅성 같은 책임회피의 삼각관계 밖,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틈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재수강 제도 변경과 같은 학과 전공 내규의 개정은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교수회의에서 출석 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학사 변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의견 교환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학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구조 자체도 문제다. 식영과 학생회는 내규 변경 후해야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학과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큰 소동을 얻지 못했다. 당장 다음 학기부터 재수강할 과목의 학점을 걱정해야 하는 식영과 학생은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어도 답을 얻을 수 없다. 물어도 대답해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식영과 재수강 최대 학점의 B+ 하향조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상향평준화된 학점을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경영대 ‘B0물’이 그러하고, 중앙대는 올해부터 F학점 이외에는 재수강을 금지했으며 고려대, 한국외대 등도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개정된 재수강 제도를 적용한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조차 교육의 한 주체인 자 제도의 변경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찌 할 것인가. 그 피해는 금금한 것을 답해주는 곳 없는 답답함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규정’이 ‘상식’을 제학하는 사회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최소실 특검법’이 국회 재적인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을 얻어 지난 17일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추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압도적인 찬성을 얻은 국회를 더불어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특검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3일이 넘을 시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다. 따라서 임명하지 않아도 소위 ‘뻔뻔하게’ 넘어 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는 것이다.

교내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어나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연임 도전,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재수강 전공 내규 변경 논란 등이 그렇다. 총학생회장의 연임의 경우 학생회 회칙과 세칙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연임의 합법성을 물을 수 없다. 개정된 단과대 규정이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규정 상 개정 과정에 학생은 참여할 자리가 없다.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그것이 국가이던, 학교이던 규정은 그 집단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도의적인 차원, 상식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규정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캠퍼스 식품영양학과와 재수강 B+학점 제한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학생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설 규정이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설명 학생이 반대를 하더라도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규정 뒤에 숨어 아웅하는 사람들

집단에 도움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그러나 대학주보 기자가 ‘상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상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영양학과에는 ‘학과 전공 내규의 개정은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교수회의에서 출석 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오로지 학과 교수만 규정을 다룰 권한을 갖고 당사자는 논의에서 소외된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없다.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은 변경 과정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언제 바뀌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도 있다.

‘악법도 법이다’이니 따라야 하는 것인가? 지난 11월 12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광장에 모인 100만의 시민이 잘못된 규정에 대한 답을 줬다. 이번에는 부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이번 식품영양학과 문제도 답은 같다. 학생의 반발이 너무나도 뻔한 상황에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발을 빼는 행위는, 지금 당장은 어물쩍 덮고 갈 수 있는 사항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집단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영 02-441-7317(미레기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